

2011. 3. 15.(화) 10:00
시의회 본회의장

제 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서



부 천 시

시정질문 답변순서

| | | |
|---------|-------|----|
| □ 재정경제국 | ————— | 7 |
| □ 복지문화국 | ————— | 15 |
| □ 도시환경국 | ————— | 23 |
| □ 교통도로국 | ————— | 37 |
| □ 행정지원국 | ————— | 49 |
| □ 원미보건소 | ————— | 67 |

차 례

【재정경제국】

- 원정은 의원 _____ 9
 - 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 부천시 사회지표 결과의 시정반영에 대하여?
- 당현증 의원 _____ 12
 - 부천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심사와 관련하여?
- 윤병국 의원 _____ 13
 -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미시행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 안효식 · 당현증 · 서강진 의원 _____ 17
 - 부천시 추모공원에 대하여?
- 안효식 · 당현증 의원 _____ 19
 -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 당현증 의원 _____ 20
 -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하여?
- 한혜경 의원 _____ 21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 부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국】

- 윤 근 의원 _____ 25
- 불법광고물 및 불법도로점용행위 등 가로미관 저해행위 근절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천시 조성을 위하여 구(區)별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실시할 의향?
 - 송내역 지하상가 방치된 공사장 대책에 대하여?
- 강병일 의원 _____ 29
-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공원·녹지 확보에 대하여?
 - 표고제한과 관련하여?
- 안효식 의원 _____ 33
-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에 대하여?
- 김정기 의원 _____ 35
- 성주산 등 부천시 산림 수목식재에 대하여?

【교통도로국】

- 윤 근 의원 _____ 39
- 노점상 인허가제 시행운영에 대하여?
 -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 나득수 의원 _____ 42
- 부일교통 불법행위 관련하여?
 - 시청사 주변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 서강진 의원 _____ 45
-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 윤병국 의원 _____ 46
- 주택가 준대규모 점포(SSM매장 등)에서 매장밖 인도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 도로관리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 원정은 의원 _____ 51
- 부천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한 대책 및 재발방지에 대하여?
- 안효식 · 한기천 · 나득수 의원 _____ 53
- 명예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채용하여 인사적체 해소 검토 방안에 대하여?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장 배치 계획에 대하여?
 - 기능직 공무원의 5급 승진과 팀장 보직 부여에 대하여?
- 장완희 의원 _____ 55
- 부천시 집행부의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하여?
- 나득수 의원 _____ 58
- 재)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 서강진 의원 _____ 59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 구)소신여객 부지에 대하여?
- 한혜경 의원 _____ 63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예산 준비사항 및 실행계획은?
 - 동 주민센터 개방에 대하여?
 -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원미보건소】

- 김정기 의원 _____ 69
- **소사보건소 환경개선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 질문의원 : 원정은 의원

-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에도 내부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업체로부터 부당한 항의 등을 받게 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데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

(답 변)

-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원정은 의원께서 공공청사 방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과 관련하여 개별 수의계약 방식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 일괄계약 방식을 제안하여 주셨음.
- 이에 따라 각 공공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원님이 개선방안을 “제안” 하여 주신 것을 자료를 “요구” 하신 것으로 잘못 표기하였음.
- 그리고, 원미구 모 동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어 2010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계약을 준비하던 중 이 문서를 받고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역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년12만원이 비싼 것으로 파악되어 동장이 인근동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실명이 업체에 알려져 업체 대표가 정당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의원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폭언을 하였다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사과 드림.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재발생시 책임을 물을 것을 문서【「직무관련 내부정보 누설금지」규정 이행 철저(2011.1.19)】로 시달하였음.
- 이번 조사결과 56개 공공청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에 약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용역계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미화용역은 2011년부터 통합 발주하고 있으며, 무인경비 용역은 2012년부터 일괄 공개 입찰할 계획임.

□ 질문의원 : 원정은 의원

- 사회지표 조사결과 나타난 시민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답 변)

- 사회지표조사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사회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의 합리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 3년 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주거·교통·환경·지역문화·보건복지등의 내용이 들어 있음.
즉, 각 분야별 우리시의 실태(현상)와 시민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비전)이 나타나 있음.
- 주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존재하는 것임. 즉, 오늘의 현상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큰 차이가 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날이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이 나날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와 공무원은 존재 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미래모습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각 분야에서 2천여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찾고, 장기·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 년 실행계획을 세우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사회지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사회지표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임.

- 참고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우리 시의 비전은 경제·주택·환경·교통을 소홀히 하고 문화예술에 편중된 모습이 아니라, 별첨의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문화·도시기반·행정의 각 영역이 고루 발전한 균형된 모습이며, 경제·주택·환경부문을 결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님.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부천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심사와 관련하여
 - 얼마전 부천시에서 공모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심사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과 의혹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한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

(답 변)

- 사업추진 근거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502(2011.1.14)호
- 2011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1기업당 1명의 인건비 월 1,200천원 × 10개월)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2011. 1. 22 공고, 7개 사업 접수(1. 31)
 - 2011. 2. 8 심사위원회(5명) 구성
 - 2011. 2. 11 일자리정책과 회의실에서 도 지침에 의한 필요성(40점), 타당성 및 성장가능성(40점), 견실성(20점)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리 시 배정인원 4개 업체를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탈락업체 중 (주)생산공동체한울타리(대표 유영식)가 지원 신청한 목공예 디자인 전문인력은 상시적 근로 형태로서의 지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미선정하였음.
- 이와 관련한 2011. 3. 9 현재 해당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사실은 없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2010년 5월 17일에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역보고회 및 보고회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회의공개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 홈페이지 공개 방안마련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지난해 7월 이후 실시된 모든 용역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구분) 개최역 및 보고회자료 등의 공개여부와 보완 대책은 ?

(답 변)

- 동 조례 개정이후(2010. 5. 17)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 용역사업은 총 22건이며, 이중 4건이 발주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착수 준비 중에 있음.
- 발주된 사업의 경우 용역보고회는 개최하였으나, 내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종 보고회의에 시민 등이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2월에 개설한 재정홈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용역개요, 계약업체, 용역과제 결과물을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에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설계공모 사업과 같이 아이디어 모집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대학생 및 시민공모전을 함께 개최하여 본 용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용역사업의 관리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음.

복지문화국

□ 질문의원 : 안효식 · 당현중 · 서강진 의원

- 부천시 추모공원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의 국토해양부 상정건에 대하여 시민이나 부천시의회의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시켰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이유는?
- 광역화장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 변)

- 추모공원 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시민들의 갈등, 인접 지자체인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 등으로 인해 처리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차기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급히 추진중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증설(공과대학, 약학대학원 등) 및 역곡복합문화센터 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취하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의 철회는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논의 후 정책결정한 사안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따라서 금번 국토해양부 상정건 철회는 시민들께 약속드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음.
- 시민들의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시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지사에게 화장 수요의 광역적 해결방법 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음. 다만, 광역화장장의 구체적 건립시기는 협의상대 지자체의 광역화장장 건립계획도 확정되어야 하고, 상대와의 광역화장장 관련 협의가 완료되어야 밝혀드릴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 또한 우리 시는 부평화장장을 인천시민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주요 언론은 “부천 주민들도 오는 5월부터 인천가족공원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부평화장장의 화장로 5기 추가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중에는 오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

- 아울러 화장장 이용시 수도권 화장장의 사용료는 화장장이 소재한 지자체 주민의 5만원보다 20배가 비싼 100만원으로 우리 주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장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 당현중 의원

-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 결정된 건립 부지를 배제하고 시청 옆 옛 부지 등을 놓고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
 - 기존 건립 부지인 춘의동 30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의향은 ?
 - 용역 입찰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와 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대한 견해는 ?

(답 변)

-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158회(2010.1.14)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제159회(2010.3.10)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제5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환경 등의 변화와 교통 연결망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포함한 예정부지를 비교하여 부지선정 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춘의동 301-2번지 일원 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문화예술분야 근무경력 직원 토론회, 성남아트센터 등을 비롯한 시설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음.
- 향후, 공연 시설 및 경영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하여 다른 지역의 공연장과 차별화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지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지난 해 2회를 치룬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향후 존폐에 관한 분명한 결정을 바라며,
- 2011년 예산에 배정한 인건비와 개최결과 보고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와 보고의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

(답 변)

-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08. 2. 14.일 설립되어 2008. 10. 10.일부터 20일간 『2008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10. 9. 28.일부터 15일간 『2010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한바 있음.
- 향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무형문화엑스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엑스포의 존폐 여부는 정관에 의한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총회를 거쳐 엑스포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민간전문직은 2010. 11. 30.일 계약종료 퇴직하여 2011년에 배정한 인건비는 없으나 엑스포의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집행위원장 등의 직책수당과 파견공무원 수당 등을 2011. 2. 17.일 정기총회를 거쳐 자체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 개최결과 보고서는 1월중에 완료되었으나 이 또한 정기총회의 보고 사항으로 2011. 2. 1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경기도 등 관련 부처에 **보고하였으며** 정기 총회를 2월에 개최하게 되어 보고가 지연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질문의원 : 한혜경 의원

○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과 “부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

(답 변)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하여

-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여 도시정책, 도시개발 수립시 주민들의 참여속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안전과 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그 실천방안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교통·공공시설 등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가족친화프로그램의 공공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제 구축과 시민참여단 및 협의체 구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도시정책,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정책 활성화로 평등도시를 조성하는 여성친화 도시를 체계화하겠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은 향후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예정이며 용역비는 2012년 예산에 반영 하겠음.

○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부천시 여성 발전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년~2012년도)의 3개 정책과제 20개 이행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1.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여성회관등을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취업 및 능력향상 교육 실시,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 방안과,
 2.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성보건 지원, 빈곤여성·미혼모·여성노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3.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 실시, 성별통계 작성,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 여성의 평생교육 계획 등을 반영하겠음.
-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향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 개정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도시환경국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전단지 및 불법 도로점용 행위 등이 가로미관과 보행권 확보를 해치고 있는데,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를 위해 구(區)별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실시할 용의는 ?

(답 변)

-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해 보행권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전단지 등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별 특성에 맞게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송내북부역 광장, 중. 상동 먹자골목, 세이브존 주변을 중심으로 11개소(원미구 8, 소사구 1, 오정구 2)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 청소년 유해광고물인 유흥업소의 선정적 퇴폐적 전단지. 명함 등은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저녁에 역 광장 주변이나 중. 상동 먹자골목,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사법권이 없는 문제)을 겪고 있으나, 특사경 및 경찰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유해광고물 정비와 단속에 행정력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
- 금년 3월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78개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4월부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수술 금지』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게재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음.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를 위하여 구별 시범거리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광고물 심의를 통해 4개소의 특정구역을 지정(길주로 북측 구간 / 1.2km), (위브더스테이트 구간 / 0.7km), (부천대 입구 구간 / 0.6km), 부천 북부역 만화특화거리 구간 / 0.7km)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거리조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광고문화가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 조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 이를 통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별 시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송내역 지하상가 방치된 공사장 대책은 ?

(답 변)

- 송내역 지하상가는 건축연면적 3,787㎡, 지하1층, 지상1층 판매 및 영업 시설로 2002.04.1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4.01.18일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굴착공사 중 건축주 (주)부천지하상가의 도산으로 공사 중단된 현장으로서,
-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관계자 대책회의를 수차례 갖는 등 대안방안 마련하여 2010.03.05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98-2 (주)명당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건축주는 사업계획변경 등(점포 수 증설 85개소→123개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 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요청 사항이 불허가 되었으며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6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치 아니하여,
- 2010.12.1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10.12.30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4개동 (현장사무소 3동, 가설식당, 연면적 491㎡ / 존치기간 2010.03.18 ~ 2012.03.11) 및 지하층 굴착부분에 대하여 2011.03.31한 원상복구토록 시정계고 중에 있음.
- 한편, 수분양자 및 건축주 (주)명당가는 2011.03.0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유재산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중에 있으나,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행정 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 예치금은 우리시(도로과)에 130백만원을 현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대집행 시 소요예산이 총 320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 되는 바, 원상복구 이행예치금 13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 예산 190백만원을 2011.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원상복구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코자 하오니, 추경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질문의원 : 강병일 의원

○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정 완화에 대하여 ?

(답 변)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52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시는 국토해양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2009년 2월 “부천시 주택건설에 적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도시개발법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정비계획수립대상 사업 등 이며,
-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공원·녹지 기준은 구역면적의 5%와 세대당 2제곱미터 중 큰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공급 계획이 기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은 추가 계획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녹지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내 타 시에 비해 다소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0 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의 1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불과 7.8㎡로 인근의 안산시와 안양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3.5㎡, 1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기 계획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2011년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총면적 6,816천㎡중 불과 44.7%인 3,046천㎡만이 공원조성 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공원조성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하며,

-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도로·주차장 등의 제공으로 타 구역에 비해 과도한 기반시설이 부담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1-3-3 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따라서, 우리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지역여건 및 녹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질문의원 : 강병일 의원

- 관내 미개발 토지 중 도시계획 조례의 표고제한 규정을 상향 조정 또는 삭제할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토지별 지번, 지목, 면적 등)
- 기개발이 완료되어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표고 제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50cm이상 절·성토가 수반되면 건축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및 개발허가 절차는 ?

(답 변)

○ 표고제한 규정을 상향 및 삭제할 경우 개발가능 토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시는 표고75m (녹지지역 65m)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 이러한 표고 제한 규정은 우리시의 현저히 낮은 녹지비율 및 자연 경관 보존 등을 위해 2001년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개발 제한 기준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검토기준은 임목본수, 경사도, 표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개발가능 면적을 알 수 없으나, 표고제한규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1.05km²정도 임.
- 그러나,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면, 인구밀도는 높으나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녹지의 보존 및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만일 표고상향 및 삭제 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심각한 자연경관 및 녹지 훼손이 우려됨.

※ 녹지지역 현황 : 붙임 참조

○ 기 개발지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 기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며, 개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 또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설치를 위한 단순 토지 굴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가능하나, 표고제한 이상 높이의 기존 대지에서 50cm이상의 절·성토 등을 수반하여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됨.
- ※ 동 표고제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5.25.) 및 인천지방법원 (2011.2.17.)의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바 있음.

[붙임]

【녹지지역 현황】

○ 부천시 표고제한이상 녹지지역 면적 : 약 1.05km²

| 주요 위치 | 지 번 | 면 적 (km ²) | 비 고 |
|-----------------|------------------|------------------------|-----|
| 계 | | 1.05 | |
| 송내동 성주중 주변 | 송내동 418번지 일원 | 0.1 | |
| 정명고, 롯데아파트 주변 | 심곡본동 768-13번지 일원 | 0.25 | |
| 서울신학대학 주변 | 소사본동 101-1번지 일원 | 0.05 | |
| 범박·계수, 소사2택지 주변 | 소사본동 산54번지 일원 | 0.65 | |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역사와 전통의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 ?
 - 시청, 구청, 동 주민 센터, 산하기관 간판 등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도배하였는데 그 의도는 ?

(답 변)

- 우리시는 1991년 전국 최초로 CIP를 개발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의 색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파란색은 CIP 규정에 부천 청색을 지정 색으로 정하여 널리 사용하여 왔으며,
- 보조 색으로 부천적색과 짙은 회색, 중간회색, 밝은 회색 등 4개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
-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타킷이 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체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2006년 브랜드 네이밍 전국 공모(993건)를 거쳐 『판타지아 부천』을 도시 브랜드로 결정하고 문자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 2008년 도시브랜드 개발과 2010년 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판타지아 부천』을 시의 브랜드로 지정하고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명품브랜드 도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현재, 시 청사 현판이나 시의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는 연두색 색상은 기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판타지아 부천』 브랜드 색상인 다섯 가지 색상의 한 종류로서 부천 브랜드 색상은 지난 2010. 1. 11일 제정된 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다섯 가지 색상을 전용 색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판타지아 부천』 전용 색상의 의미

- ▶ 청색 (경제도시 부천), ▶ 하늘색(희망도시 부천), ▶ 연두색 (행복도시 부천)
- ▶ 주황색(복지도시 부천), ▶ 빨강색(문화도시 부천)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섯 가지의 『판타지아 부천 색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김정기 의원

- 부천시는 전 산림에 대한 곤파스 피해 복구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부천시민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시급히 식재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답 변)

- 2010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산에서 자라는 천근성 수종 피해가 집중되어 원미산2,043, 성주산2,354, 작동산1,703 등 총6,100본의 수목이 도복 되었으며 2010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168백만원을 지원 받아 2010년 10월부터 12월 기간중 원미구68,308천원 1,611본, 소사구 56,780천원 1,295본, 오정구43,593천원667본 등 총 3,573본의 풍도목을 제거하는 등 응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 2011년도에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300백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태풍 피해목 2,300본 제거에 140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160백만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음.
- 또한 태풍 피해로 훼손된 산림경관을 안정적인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시청 320백만원, 원미구 68백만원, 소사구 80백만원, 오정구 62백만원 등 총 53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시청 9,600본, 원미구 2,080본, 소사구 2,400본, 오정구 1,920본 등 총 16,0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 산림 내에 야적된 벌채목 등 부산물은 선별하여 활용 가능한 원목은 화단경계목, 원목의자, 화분 등으로 제작하여 재활용하고, 파쇄 가능한 원목은 톱밥과 우드칩 등으로 생산하여 조림지, 도시녹화사업지의 멀칭재로 활용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도록 하겠음.

- 시민 모두에게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기간인 2011년 4월 1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여 진달래 등 2종 2,030본을 식재하고, 원미구에서는 감나무 등 8종 3,700본의 나무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경관 복원사업 추진 시 계절 별로 꽃과 열매,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환경 숲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교통도로국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노점상 인허가제 시행운영에 대하여
 - 노점상허가제를 하루 속히 시행할 의사는 ?

(답 변)

- 역광장을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임.
-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점상을 행정의 제도권역으로 흡수하여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 정책적 효과달성 및 거리의 문화·경관적 요소를 적극 살리고자 부천시 노점상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점단체 및 노점상인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비방안 및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였음.
- 또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의원, 노점단체, 시민연대 등을 포함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타 시의 벤치마킹과 운영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내·외부 설명회를 통하여 거리문화·경관적 조성으로 무질서한 노점거리를 정비하도록 하겠음.
- 또한 금년도에는 송내역 남부광장에 대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2012년 송내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시점과 맞추어 단계별로 역세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역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 올해 전국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씨가 많았으며 1, 2월 계속 영하권이 지속되어 예년보다 동결심도가 취약하여 동절기 결빙되었던 토사, 암반층의 악화 등 해빙기 안전대책은 ?
- 장미연립 붕괴위험 등 해빙기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람.

(답 변)

○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 관련 질의에 대하여

- 우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재난 취약시설을 “특정 관리대상시설”로 지정 . 관리하고 있음. 2010년 12월말 현재 2,062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동절기, 해빙기, 우기, 추석절 등 계절별로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빙기 대형공사장과 축대·옹벽 등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10일부터 3월31까지 해빙기 특별 상황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건설 공사장(중단된 공사장 포함), 절개지·낙석 위험지역, 축대·옹벽,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6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시장께서 △오정구 작동산 절개지 △「여월 택지~남부 순환로간 광역도로공사」 △멸피길 절개지 △원미2동 장미연립 등 재난 취약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해빙기 대책마련을 지시하여 조치한 바 있음.

○ 장미연립 붕괴 위험에 대하여

- 장미연립 12동은 1977년에 준공, 34년이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1개동 4세대(12명)가 거주하고 있음, 201호의 2층 발코니 슬라브 처짐과 부착력 저하로 조적조 난간(폭 0.9m, 길이7m)이 탈락된 사고가 지난 2월 11일 있었으나 201호는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202호는 임차인이 이주하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임.
- 또한 장미연립 전체 12개동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재난 취약시설로 지속 관리하여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 하겠음.

□ 질문의원 : 나득수 의원

- 부일교통 불법행위 조치결과 ?
 - 오정구 작동 248-1 버스차고지 불법행위 및 무단점용 조치사항
 - 부일교통 그린벨트내 도로불법점용에 대한 관리소홀 공무원 조치 결과
- 부일교통, 부천시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사용 특혜여부 ?
 - 특정 교통업체에 합법을 포장한 특혜사항

(답 변)

○ 부일교통 불법행위 조치결과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내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불법행위 및 도로부지 무단 점용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02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 2010년 11월 컨테이너 철거 및 도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 하였음.
- 아울러, 부일교통의 그린벨트내 도로부지 불법점용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적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명을 원미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입건조치 후, 2011.1월 부천시청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

○ 부일교통의 부천시자연학습장 부설주차장 사용 특혜 여부에 대하여

- 부일교통에서 점용했던 그린벨트내 도로부지를 원상 복구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고강동 공영차고지 준공 시 까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 학습장 부설주차장에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없는 24시부터 새벽 6시 까지 야간박차를 조건으로 부설주차장중 300m²를 월625천원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고강동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부일교통 차고지를 이전토록 조치하겠으며, 버스운행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나득수 의원

- 시청사 주변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
 -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내표지판 증설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시청사 주차장을 시주관 행사시에만 개방하지 말고 야간 및 토요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답 변)

- 시청사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 시청사 주변은 대형 유통업체 및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비롯하여 중앙공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찾는 시민들과 시청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참여 시민들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 시청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근절 시키고자 금년 1월부터 고정용 CCTV를 중앙공원 북서쪽에 4대, 이마트·현대백화점 사이 2대, 구 버스터미널 앞 및 문예 사거리에 각 1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고정용 CCTV 단속지역 이외는 차량탐재 CCTV 3대 및 수기단속 3개조(2인 1조)가 평일 07:00~21:00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1~2회 순회 계도 및 민원요청 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시에는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주말 및 휴일 순회단속 횟수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음.

○ 중앙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확충에 대하여

-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보수와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안내표지판 6개소를 신설하겠으며 기존의 교통표지판은 3월말까지 정비(10개소)를 완료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시청사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 현재 시 청사 내 주차장은 총 742면(지상 288, 지하 454)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청 내 지상주차장(288면)을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988면)은 유료로 24시간 개방해 운영하고 있음.
 -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방 : 24시간(주차요금 1일 1,500원)
- 그러나, 시 청사 내 지하주차장(454면)의 야간 및 휴일의 개방에 대해서는 청사방호(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계수대로 개통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2010년 완공)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개통할 것인지 ?

(답 변)

- 계수대로는 서울~부천~시흥을 연결하는 서부수도권의 광역도로망으로서 당초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짐에 따른 지장물(가옥) 철거·토목공사 지연과 평년보다 많은 강우 및 강추위로 인한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준공시기가 지연되었음.
- 현재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시(서울·시흥)와 협조하여 금년 7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주택가 준 대규모 점포(SSM매장 등)에서 매장 밖 인도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 대책은 ?
 - SSM등의 매장 밖 영업행위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그리고 차후로 이러한 탈법적인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 계획

(답 변)

- 주택가 준 대규모 점포(SSM매장 등)에서 매장 밖 인도 불법점유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인도를 점유한 카트, 상품진열대, 천막 등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그동안 자율정비 428회, 계고서 발부 34회, 물품수거 149회 등 수차례 걸쳐 단속과 강제수거를 하였음.
- 그러나 단속 시에만 정비 되었다가 재 발생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는 단속과 과태료부과 등을 통하여 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점포주 스스로가 인도위에 물건을 내 놓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도로관리에 대하여 ?

- 홍천길 자전거 횡단로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 및 타 자전거횡단로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
- 계남고 앞 산우물로의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의견에 대하여
-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통섬(보행자가 많고 대기시간 김)에 수목 식재 및 차양시설, 벤치 설치 등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

(답 변)

○ 홍천길 자전거 횡단로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에 대하여

- 홍천길(부흥로)의 계남고등학교 앞 자전거 횡단도 등 보행자 신호등과 가로수, 경계석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원미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 및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다만 가로수나 신호등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 자전거횡단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계남고 앞 산우물길의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의견에 대하여

-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대)는 차량충돌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산우물길 전체의 중앙차선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통섬에 수목식재 및 차양시설, 벤치설치 등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

- 무지개고가 사거리는 길주로 프로젝트(중동IC~종합운동장사거리) 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향후 길주로 프로젝트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 질문의원 : 원정은 의원

- 부천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한 대책 및 재발방지에 대하여
 -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음주, 도박 등 과 관련하여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부천시의 입장은 ?

(답 변)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또한 이로 인해 조직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무원 개인에게도 그동안 쌓은 공적과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강화하고 전 직원에게 청렴 홍보문자 발송과 청내 방송 그리고 청렴실천 다짐결의 대회를 갖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음.
또한, 비리가 발생되면 우선 대기발령 차원인 시정현장봉사단에 배치하거나 직위해제 또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그 후 징계절차를 밟아 강력한 징계처분을 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접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 우선 예방 차원으로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 및 부패취약 업무담당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SMS문자 발송, 민원 클린콜 운영과 청렴교육 이수제를 비롯한 직급·직렬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실천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차원의 특별감사 실시,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365일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공직자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고 비위·부패공직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직무관련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알선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금품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하여 조직에서 퇴출시키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음.
- 아울러, 공직자가 부정, 부패에 유혹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공직자의 청렴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우리사회 발전의 원동력임.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과 높은 청렴의식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추된 “청렴도시 부천”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겠음.

※ 청렴·공직기강 관련 주요 시책

| 구 분 | 기존 시책 | 추가 시책 |
|-------------------|--|--|
| 청렴시책 및 인사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민원클린콜 운영 • 음주운전 금지·청렴 관련 SMS 발송, 청 내 청렴 방송 실시 •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 클린명함 제작 • 공직자 부조리·양심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 간부공무원 및 부패 취약업무 담당공무원 청렴도 평가 • 내부 인터넷 『청렴 팝업창』 홍보 • 징계처분자 등 성과상여금 패널티 적용 • 직급별·직렬별 맞춤형 교육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 예방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공사 일상감사(계약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다발 및 부패취약 부서 특별 기획 감사 • 고충민원 컨설팅(권익위) 수행 |
| 감찰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시기 기강 감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복무담당 부서 합동 감찰 |

□ 질문의원 : 안효식 · 한기천 · 나득수 의원

- 명예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채용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장 배치 계획에 대하여 ?
- 기능직 공무원의 5급 승진과 팀장 보직 부여에 대하여 ?

(답 변)

- 명예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채용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 우리시 인사적체는 도내 타 시·군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군은 11년 3월, 기술직군은 11년
 - 6급에서 5급 승진은 행정직군이 16년 10월, 기술직군은 13년 10월
 - 7급에서 6급 승진은 행정직군 12년 9월, 기술직군 13년 7월이 소요됨.
 - 더욱이 6급이상 정년퇴직 예정자가 올해 1명에 불과하고, 2014년까지 34명에 그쳐 당분간 인사적체가 불가피한 실정임.
 - 우리 시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 23년동안 도에서 내려오던 소사구청장을 2월 14일 우리시 공무원으로 자체 임용하였으며,
 - 인사교류 차원에서 우리 시에 근무 중인 도 자원 공무원을 감축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바 있음.
 - 이외에도 6급 무보직 확대와 간부공무원 명예퇴직 확대, 그리고 일부 행정기구 신설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음.
 - 현재 산하기관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4급 명예퇴직자 2명, 부천문화재단에 5급 명예퇴직자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앞으로 산하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기관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공무원 채용 확대 여부를 검토 하겠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장 배치 계획에 대하여

-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부천시공무원 2,093명중 125명이 사회복지직임.
- 이러한 추세에 따라 '10. 9. 27. 조직개편 시 15개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 하였음.
- 하지만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행정직 등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 아직까지는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렬간 인사균형, 경력, 업무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보직 계획에 대하여

- 우리시 공무원은 2,093명이며 이중 일반직과 별정직이 1,770명, 기능직이 323명으로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임.
-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 사무만을 수행하는 한계 때문에 사실 일반직에 비해 제도상 승진이나 직위 부여 등 다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
-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용인시와 안양시가 각 2개팀, 화성시와 과천시 1개팀을 선정하여 기능직 6급에 한해 직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고양시에서는 팀장 직위 부여제도를 운영하다가 일부 문제가 있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 시는 기능직 6급에 대한 직위부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부터 타 시군의 운영사례, 직위부여 가능 부서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기능직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능직 5급 신설 문제 또한 우리시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 으로서의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할 사안임.

□ 질문의원 : 장완희 의원

- 2차례의 조직개편과 자리안배형·전시성 인사, 코드인사를 반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 2천여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할 의향에 대하여 ?
-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건수와 이유, 인사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요구에 대하여 ?

(답 변)

- ‘어설픈 2차례의 조직개편이 무수한 단어의 성찬을 만들어 내고 소통과 시민의 이해가 어렵다’는데 대하여
 - 지난 조직개편은 그동안의 의견수렴의 틀을 뛰어넘어 소통에 중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입법예고 후 공무원, 시의원,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무엇보다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임.
 -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명칭은 알기도 쉬워야 하지만, 부서의 역할이 함축되고 시정목표와 비전을 담아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우리 시도 이러한 차원에서 민선5기 시정의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창조도시사업단, 참여소통과 등의 부서명칭을 설정하게 되었음.
 - 다만, 신설부서와 구체적 업무에 대한 일부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은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다시 점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네 차례의 인사가 지역성·정치적 관계만을 고려한 자리안배형 인사, 회전문인사, 전시성 인사, 코드인사였다’는데 대하여
 -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 이러 저러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리안배형, 회전문 인사, 전시성 인사, 코드인사

라느니 인수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힘.

- 2천여 공직자가 모두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직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공직내부 의견을 들어 연공과 능력을 안배하는 인사를 단행했음.
- 대의 민주제 하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민선5기 시 집행부가 그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려면 시장의 시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감사관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임용 후 어려운 시정여건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사방향을 정립 중임.
-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시의 핵심적 문화정책인 영화와 문화에 이해가 뛰어난 경력자를 채용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역시 전임 경기 DCA 원장을 역임한 인사로 만화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생각함.

○ ‘2천여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하라’는데 대하여

- 시에서는 인사적체 등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부 직위공모제(6명), 팀장급 국·소장 추천제(10명), 희망보직제(46명), 인사시스템 개선 의견 수렴(5회)을 실시하였고, 이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음.
- 금년에는 인사적체 해소대책 추진(도지사 건의), 우수성과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베스트 부천 공직자, 문화특별시 으뜸상 등), 국소장추천제 및 직위공모제 확대, 6급 근속승진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며, 계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보완 하겠음.
- 민선 5기에 실시한 인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 바람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직자와 중앙·지역언론들도 타 지자체에 비해 대체로 안정되고 공직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였음.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연구·노력해 나가겠음.

○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하여

- 인사청문회 건은 성남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태이므로 타 지자체의 도입추이를 주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하겠음.

○ 전보 및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보제한자 전보내역 》

- 직급별(단위 : 명)

| 구 분 | 합계 | 4급 | 5급 | 6급 | 7급이하 | 비 고 |
|-----|-----|----|----|----|------|-----|
| 인 원 | 114 | 6 | 24 | 32 | 52 | |

- 전보사유별(단위 : 명)

| 구 분 | 합계 | 조직개편 | 보직관리 | 발탁 | 고충처리 | 비 고 |
|-----|-----|------|------|----|------|-----|
| 인 원 | 114 | 42 | 25 | 16 | 31 | |

《 인사위원회 심의현황 》

| 일 자 별 | 심 의 내 용 | 비 고 |
|------------|--|-----|
| 2010. 7. 2 | •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심의 | |
| 2010. 7.12 | • 개방형직위 지정 •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심의 | |
| 2010.10. 5 | •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심의 • 시정 현장봉사단 대상자 심의 | |
| 2011. 2. 9 | •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심의 | |

□ 질문의원 : 나득수 의원

- (재)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 예치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1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의사는 ?
 - 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해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장학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하여 ?

(답 변)

- (재)부천장학재단의 재산은 부천장학재단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부천장학재단 정관 시행규칙 제10조(재산의 관리),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이사의 의결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건실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사회에 요청하여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의 장학업무 담당국장과 감사관이 당연직이사와 감사로 되어 있음.
- 재단의 이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산을 예치한 것은 부천장학재단 정관 시행규칙 제10조(재산의 관리) 규정에 의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내 금융기관 중 가장 좋은 예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임.
- 앞으로 금융기관 선정 등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만 선별하여 무상으로 우유를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지므로 무상급식에 우유를 포함하던지, 제외시킬 의향은 ?
- 무상급식비가 일정액으로 지급되어 물가변동에 따라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
-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사서지원, 원어민교사지원 학습비 등 학교운영비가 감소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 변)

○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대하여

- 어린학생들의 건강향상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사업은 2010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약 2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약 53,8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중임
-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
- 2014년까지는 초·중학교 전체학년 약 78,400명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

○ 우유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에 대하여

- 학교 우유급식은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3억3천9백만원 및 도비 4천3백만원, 시비 1억2백만원 등 4억8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 관내 초·중·고등학교 122개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시책 사업임.
- 우유는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초등학교가 희망학생에게 유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임.

- 또한 우유를 먹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단가로 제공하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상으로 우유를 먹는 학생들도 질 좋은 우유를 값싸게 먹는 효과가 있음.

○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하여

- 급식단가가 올라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급식단가를 2010년에 비해 100원을 상향 지급하고 있으며 급식의 공동구매, 추천식단제 등을 통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음.
- 2012년부터는 친환경 우수 식자재를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임.

○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운영비 감소에 대하여

- 무상급식 예산과 상관없이 금년도 부천시의 교육경비는 2010년 104억 5천9백만에서 3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137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일반회계의 3%수준인 243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임.
- 학교의 사서지원은 인건비로 부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님.
-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교육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부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예산을 줄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학교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 등교시간 이전에 주차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안 및 공공용쓰레기봉투 지원방안은 ?
 - 학교운동장에 방법등 설치 용의는 ?

(답 변)

-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운동장 같이 넓은 장소를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임.
- 그러나 학교운동장을 야간 주차공간으로 개방했을 때 주차차량 관리상의 문제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몰지각한 어른들로 인한 우범화, 장기 차량방치 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 시설관리 주체인 학교 측에서 선뜻 개방을 하지 못하는 입장일 것임.
- 학교측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은 환경부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상지원은 불가하며 폐기물 처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운동장 개방 및 방법등 설치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지만 부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소사고등학교 주변 소신여객 차고지 주변 활용 방안은 ?
- 차고지 이전 후 소사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급식소 등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답 변)

- 소사고등학교 인근 구)소신여객 차고지 부지중 2,791㎡는 소신여객 소유이고, 866㎡는 부천시 소유 이며,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 및 용도변경이 선행 되어야 함.
-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9.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 토지 취득 및 용도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고, 2010. 3월 소사고등학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투융자 심사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투융자 보류사업으로 분류 되어 있는 상태 임.
- 향후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투융자 심사 및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한혜경 의원

-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예산 준비 사항 및 실행계획은 ?

(답 변)

- 우리 시 체육시설 현황은 공공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 등 11개소, 동네 (야외)체육시설로 151개소 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조사된 우리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체육시설 개·보수비(200백만원)로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개·보수하겠습니다.
- 또한 편의시설외 실내시설 중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에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및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구 분 | | 중 합 운동장 | 소사국민 체육센터 | 부 천 체육관 | 서 촌 체육관 | 송내사회 체육관 | 비고 | | |
|------------------|------------------|--------------|---------------------|------------|------------|-------------|-----|-----|--|
| 공 통 필 수 | 편 의 시 설 | 내부 시설 | 경사로, 승강기등 (2층이상)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 |
| | | 위생 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 | 설치 | 설치 | 설치 | 미설치 | 설치 | |
| | | | 샤워실, 탈의실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
| | | 안내 시설 | 점자블록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
| | 기타 시설 | 관람석 | 설치 | 미설치 | 설치 | | 설치 | | |
| | | 매표소 | 미설치 | 미설치 | 설치 | | 미설치 | | |
| | 실 내 시 설 | 부천 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
| | | | 골볼골대 |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미설치 | |
| 소사국민 체육센터수영장 | | 입수편의보조시설 | | 미설치 | | | | | |
| | | 탈의실진입보조시설 | | 설치 | | | | | |
| |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 설치 | | | | | |
| | | 보조휠체어 | | 설치 | | | | | |

□ 질문의원 : 한혜경 의원

○ 동 주민센터 개방에 대하여 ?

- 직장인, 청소년, 맞벌이 부부들이 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공간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답 변)

○ 우리 시는 현재 37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및 주민편의 기능 등 270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하여

- 현재 휴일과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헬스, 탁구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한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주민 욕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여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 청소년 등을 위한 전시회,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지역맞춤형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동 주민센터의 전면 개방에 대하여

- 우선 시설 보안과 제반 안전대책, 주민센터 인력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공익 목적이용 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 체력단련실, 전산실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각 계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일의 경우 20:00까지, 휴일은 단계적으로 무료대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한혜경 의원

-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과 매점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방안, 사회적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시의 견해는?

(답 변)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 본청과 3개 구청에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감면),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의거 구내식당과 매점을 위탁운영 또는 직영하고 있으며,
- 시립도서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10개 산하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고가 낙찰방식 등 운영주체별로 선정 기준과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시·구청 구내식당은 1997년부터 제안입찰방식에 의하여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더욱 맛있고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 시립도서관 등 최고가 낙찰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운영주체별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도하겠음.
- 사회적기업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2011. 1. 17.자로 제정·공포된 「부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원미보건소

□ 질문의원 : 김정기 의원

- 오정, 소사보건소에 한방, 치과 진료가 안 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 차별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한방과 치과 진료 실시
- 소사 보건소는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열악하여 급한 경사 계단에 엘리베이터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위협에 노출 우려로 지하시설 환경 개선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열악한 시설 개선

(답 변)

- 오정, 소사보건소는 한방 및 치과진료를 실시하지 않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간 의료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금년 1월에 이러한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사업전반에 대한 진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방실 설치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치과실은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치과 의사회와 연계한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를 추가 확보하여 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소외계층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현재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정보건소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찾아가는 건강 버스 사업을 도입 하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소사보건소는 198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고 승강기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전체 보건소 이용객의 80%가 50~80대 연령층인바, 사고 위험과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음.
- 단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신축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